

“만우절 장난전화 댄 공무집행방해”

작년 4871건 형사 처벌...매년 증가세 경범죄처벌법·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여인숙 감금돼 있다” 신고자 벌금형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청이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 경찰청은 3월 31일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

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거짓신고 처벌은 2021년 3757건→2022년 3946건→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거짓신고로 밝혀지는 일이 있

었다. 경찰이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월에는 법원에서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며 나흘 동안 16번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한 경찰 차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친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장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면기자



나주경찰, 협력단체 연합회 발대식 개최

나주경찰서는 지난 3월 29일 2층 소회의실에서 협력단체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무안경찰, 모범운전자회 치안 협력 강화 간담회 개최

무안경찰서는 3월 28일 무안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강용준 서장, 교통과장, 모범운전자 회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무상황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진도소방, 봄철 산불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진도소방서는 지난 3월 29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진도군 침철산 등산로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소방, 봄철 건설 현장 관서장 현장지도방문 실시

완도소방서는 지난 3월 29일 봄철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완도 미르세 센터시티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기자



구례군장애인복지관-구례소방, 합동 캠페인 진행

구례군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3월 28일 전통 5일 시장 상설무대에서 구례소방서와 연계하여 장애인해캠페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장흥소방,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추진

장흥소방서는 오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령을 심다’라는 주제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육아지원 제도 확대’에 향후 5년간 예산 2조2천억원 소요”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예정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 관련 예산이 2조2372억원 더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월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를 지난 29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달하는 등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를 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은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초기 6개월 간은 50만원씩 매월 상향해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는 경우, 육아휴직 6개월째엔 부부 합산 3900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녀 양육을 위해 주15시간-35시간 수준으로 근로시간

을 단축하고,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는 80%를 지급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기한을 주10시간으로 확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또한 아이 당 단축을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두 제도 모두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13만1087명) 대비 감소했지만, 최근의 출산율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사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해 2만3188명이 사용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대치로,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사용자 증가를 토대로 개편되는 제도가 자리 잡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조237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를 내었다. 연평균 447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은 ▲2025년 2850억원 ▲2026년 3180억원 ▲2027년 3357억원 ▲2028년 3544억원 ▲2029년 3740억원 등 총 1조6671억원으로 전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5년 764억원 ▲2026년 918억원 ▲2027년 1103억원 ▲2028년 1325억원 ▲2029년 1592억원 등 총 570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두 제도 모두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등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직급여 외에도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이 실업급여 계정의 주요 지출 사업 중 하나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매년 일반회계에 반영해 고용보험기금 전출금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액 기준 모성보호급여 전체 지출 중 국가재정 부담이 16.0%에 불과하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향후 육아지원제도 확대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고용보험기금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수익자부담원칙 측면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슬비기자



‘특권국회 뿌서’ 나라사랑 공생시민운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바른 정치 문화 페스티벌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비리 얽힌 매입형 유치원 총괄 공무원 징계 정당”

‘징계처분 취소’ 소송원고 청구 기각

금전 청탁 비위에 얽힌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제대로 운영치 못한 전직 교육청 공무원의 불문 경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시교육청 소속 전직 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광주시교육청 모 부서 과장으로 일하며,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을 총괄해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 유치원 운영 회의록 위조했다는 등의 의혹이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 사이에서 일며 크게 반발을 샀고 결국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

교육청은 A씨가 교육단체·학부모 등의 민원이 이어지는 데도 총괄 책임자로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대응만 했으며 ‘성실 의무 위반’으로 ‘불문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회의록 위조 등을 알 수 없었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안 이후에는 감사관실에 통보했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은 원아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운영의 동요 여부는 선정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실무 부서 과장으로서 회의록 위조 여부를 조사·판단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형식적 조치만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 중단도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뒤늦게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오히려 유치원 측이 내놓은 형식적인 답변만을 맹신해 행정 불신까지 조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 과정에 뇌물을 주고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시 교육청 공무원·브로커 등 5명은 이미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선욱기자